

책으로 세상을 읽다

한·일 갈등을 풀고 싶다면 남북 분단을 바라보라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흔히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면서도 동시에 가장 먼 나라’라고 부른다.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결과 독립 후에도 한동안 양국은 국교를 단절한 채 지내왔다. 그러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하며 교류를 하기 시작했으나 식민지 지배의 상흔은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두 나라는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며 우호 관계와 적대 관계를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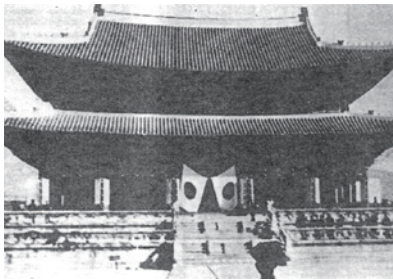
현재 한일 관계는 국교를 맺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은 크게 반발했고, 한국을 수출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강상중 지음 / 출처: 교보문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역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때 한국은 더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려고도 했다. 역사에서 일어난 문제를 경제, 안보와 연관시키며 갈등의 폭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고는 도저히 한·일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책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를 쓴 강상중 저자는 남북한의 화해와 통합의 과정에서 한일의 역할이 지금의 갈등을 풀어나갈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상중 교수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를 지낸 학자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 와 2차 대전 이후를 날카롭게 분석한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왼쪽)과 일본의 혐한 시위(오른쪽) / 출처 : 연합뉴스

과 일본의 경계에 서 있던 강 교수는 자연스레 한일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게 됐다. 본래 일본 명을 썼으나 대학 시절 한국 방문을 계기로 ‘강상중’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최악의 한일 관계 원인 1 :
좁혀지지 않는 과거사 인식**

저자는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놓고 과거사 문제와 함께 한반도 분단 체제를 주요 원인으로 거론한다. 우선 과거사 인식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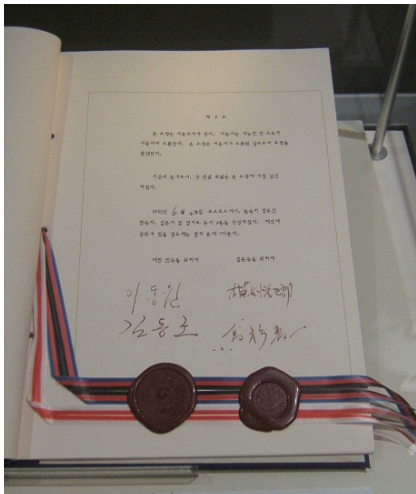
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의 한국 경제 진출을 조건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협정이었다. 또한 청구권에 관한 해석도 일본은 개인에 의한 청구권까지 해결됐다는 인식이나, 한국은 개인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입장이 갈렸다. 저자는 이 조약이 이후 지난 한·일 과거사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매우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 1998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그 시작이다. 해당 선언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담겼고, 이를 통해 양국



2002년 한일 양국은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 / 출처 : 나무위키

은 역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역사와 안보 및 경제를 분리해 관리한다는 기조하에 양국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착수했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장면(오른쪽)과 조약 문서(왼쪽) / 출처 : 위키피디아



한일 갈등의 상징인 독도(왼쪽)와 위안부 문제(오른쪽) / 출처 : 위키피디아

다. 한국이 IMF 위기를 겪을 때 일본이 도와주었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 또 양국의 대중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기도 했다. 저자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시기를 ‘전후 최고의 한일 관계’라고 평가했다.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저자는 다자간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따라서 그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일 외교를 가장 모범으로 평가한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이에 따라 대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또한 최초로 북한과 평화적 교섭에 나서면서, 그의 정책 방향은 적어도 그의 집권 시기에서만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 또한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교 갈등을 해결코자 한 김대중의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책 말미에 ‘이 책은

김대중에 대한 오마주로서 세상에 내는 것’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일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에 관한 발언을 시점으로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일왕 방한과 관련해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면 오라”고 한 것이 일본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는 일본의 신뢰를 흔들었으며, 문재인 정권 시기 ‘위안부 합의’ 파기에 준하는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을 2018년 이후 격화된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비판한다.

이 대목에서 특히나 한국 독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자꾸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역사 왜곡, 독도 도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 정부의 강경 자세로 촉발된 사태’라는 취지로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저자는 책의 논지를 ‘과거사 반성이 부재한 일본’에만 맞춰 전개하지 않는다. 이 보다는 현 갈등 상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의중을 파악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에 익숙지 않은 한국인의 입장에서선 상대적으로 저자가 일본을 옹호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본의 입장을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

저자는 결국 ‘한·일 기본조약’의 준수 아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사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갈등이 심화되어 ‘한·일 기본조약’이 파기된다면 한일 외교 관계 자체가 끝날 수 있음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한일 관계 원인 2 : 남북 분단 체제



남북 분단 체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한일 갈등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다 / 출처 : 위키피디아

문제는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갈등에서 빠져나갈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자는 ‘분단 체제’에 주목한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 간의 분단 체제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본은 남북 분단 체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미일 동맹을 통한 안보 유지를 기본 전략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외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불만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일 갈등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은 남북 분단 체제와 그 극복과정에 있다는 얘기다.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은 진

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와중에도 남북, 북미 간에 유의미한 협상과 조약이 맺어져 왔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 대목이 흥미롭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으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이로써 각종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 체제를 완화해가는 데 남북이 합의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일본과의 소통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과의 소통에 많은 외교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최초로 방북해 ‘조·일 평양 선언’에 서명하는 성과

로 이어졌다. (물론 얼마 못 가 북한의 일 본인 납치 문제가 터지며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일본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배제한 쪽에 가까웠다. 그리고 북미 단절로 중재자 역할까지 어려워진 지금, 더 이상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우호를 도모하는 일과 한국과 일본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북한적 외교 전략을 간과했다”라고 적었다.

한편, 책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로 북미 간 ‘신뢰’ 문제를 꺼내 든다. 북한은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약속을 서로 믿지 못하는 판국이다. 저자는 단계적 접근과 상호 확증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북한에는 핵을 하나씩 내줘도 체제가 유지된다



2018년 6월 12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되었다 / 출처 : 위키피디아

는 믿음을, 미국에는 제재를 하나씩 완화해도 비핵화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나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자는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보장할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주문한다. 과거 6자 회담 같은 다국 간 안전보장 프레임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미국과 가장 친밀한 동맹국으로서 북미 대화의 촉매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 분단 체제에 기대지 말고 남북 평화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번영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권고한다. 책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남북 평화가 일본의 이익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일본을 독려하기 위한 한국의 소통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한·일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만이 지금의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다. 타협할 수 없는 과거사 문제로 묶여 있는 한일 관계를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협력하면서 풀어보자는 것이다.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의 역사가 문제에 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다는 기대도 녹아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한·일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사와 함께 남북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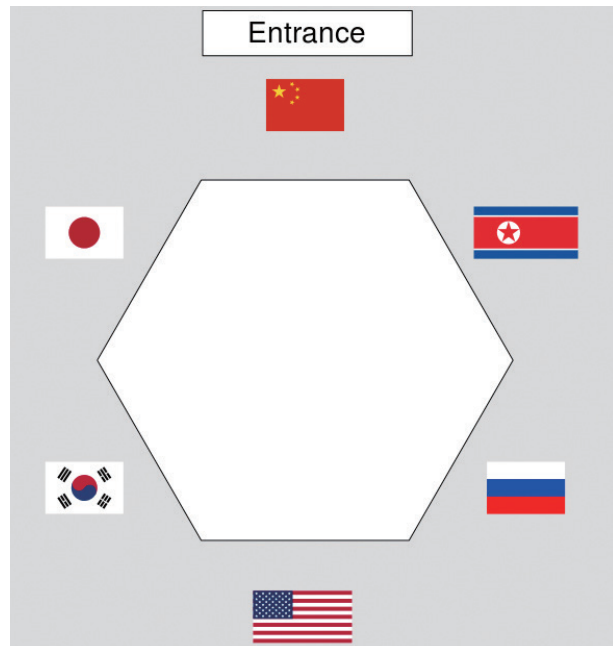
단 체제를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인구, 기후 변화, 지정학적 요인까지 폭넓게 접근했다. 원인 분석을 다양하게 할수록 좋은 점은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만 보면 절대 한일 관계가 풀릴 것 같지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면 갈등 해소의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또 한 가지는 한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이 아닐까 한다. 저자는 과거사, 분단 체제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한국과 일본, 북한 등 당사국의 입장 모두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갈등 해소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저자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그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독자도 있으리

라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주장만 밀어붙이는 외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접근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적 관점을 가진 독자들은 저자의 해법이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한 북한의 도발 억제, 대북 압박을 통한 협상 우위의 전략을 인정하는 등 나름의 현실주의적 사고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한일의 극한 갈등을 목도하며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 이는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답답함일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를 읽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노무현 정권 시기 진행된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었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했다 / 출처: 위키피디아